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토론회

매춘여성, 죄인도 가해자도 아니다

국가 전문센터 제안 눈길, 시설기관은 '유인동기' 제공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전문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매춘문제의 실상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막달레나의 집, 다비타 공동체, 두레방 등 매춘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한소리회’(회장 문요한나)와 인천여성의전화(회장 김예숙)는 지난달 26일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춘문제 극복은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동안 매춘여성들과 함께 해 온 한소리회 문요한나 회장은 “매춘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

난과 아들선호, 근친상간 등 가부장제와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구조가 낳은 사회문제”라면서 “여성들은 또 사회에 복귀하려 해도 용기와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매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홍미영 소장은 “그간 매춘여성문제는 수혜자인 여성에게 ‘효과적인 정책’이 었다기 보다 격리위주의 정책이었다”면서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철저한 집행의지와 함께 개정안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있는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매춘여성들은 버지

인으로 간주, 감금이나 고립 등 격리 위주의 매춘정책, 남성들에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한다거나 일반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등의 공무원들의 경직되고 편협한 인식을 바꾸어

야 할 때라는 것이다.

홍소장은 이어 “인천지역에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협성원을 조사한 결과 기술교육을 받은 24명 가운데 8명만이 취업했고 그나마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춘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보다 죄인도 가해자도 아니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전문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매춘여성들의 공동체 ‘다비타의 집’ 전우섭 대표는 “매춘여성들이 사사 이시 체도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은 매춘 정책은 결국 반쪽의 이론, 반쪽의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인권 유린을 당해 병적인 상태에 있는 매춘여성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국가 매매춘 전문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전문센터는 법 개정, 각 구청이나 지역보건소에 산재해 있는 검진 및 치료시스템 일원화, 예방·상담·홍보·진료 전문가 양성, 인신매매, 빠리꾼, 빠기 등 중간착취그룹과 포주, 전문경영인, 펌프 등 원착취그룹에 대한 감시 등 전체의 매매춘문제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기관이다.

전대표는 또 “매매춘문제에는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폐쇄적인 운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시설들의 개방화, 매춘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 운영 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그간 정부의 지원없이 매춘여성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을 사단법인화해 정부의 지원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